

6자 회담 이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전망

- 출처 :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 일시 : 2005년 9월 23일
- 연사 :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
- 주최 : 중앙일보,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1. 9·19 공동성명 도달 과정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 지난 9월 19일 제4차 6자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 해결에 기초를 마련한 매우 중요한 성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고 험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슬기롭게 성공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① 1차 북핵 위기 상황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로 야기된 긴장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음

과거의 경험을 되짚어 봅시다. 제 1차 핵 위기가 1993년 3월 북한이 NPT 탈퇴를 계기로 촉발된 이후 10년이 지났고,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NPT 탈퇴 이후 미국 정부는 미국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6월에 북핵 문제 원칙에 합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 뒤로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한 때는 군사적 조치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1994년 봄의 일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핵연료를 추출하지 말라고 하고 북

한은 이를 거부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매우 고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면서 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았고 그 해 10월 미국 제네바 기관 합의를 통해서 실천적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때까지의 과정, 즉 전쟁 직전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제네바 합의를 실천해 나가면서 부딪혔던 수많은 난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미국은 대북 합의를 주도했던 민주당이 그 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서 패배하여 여소 야대 정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 확보가 어려워져서 북한에 원유공급을 약속해 놓고도 원유공급을 위한 예산 확보가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래 경수로는 2003년까지 건설해서 북한에 넘겨주기로 하고 그 때 북한 핵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때의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경수로는 한 기도 건설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경수로 공사가 2년 전에 중단되었을 때 진도는 약 35%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1차 핵 위기의 합의, 실천과정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합의와 실천을 위해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함

이에 따라 2차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원칙문제는 합의 했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치들을 협상을 통해서 합의 하는 과정이 매우 험난하고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순탄하게 순풍에 돛을 달고 잘 나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간절하지 않은 현실세계가 그럴 수 있겠는가 하기 때문에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호 신뢰가 결핍되어 있고, 또 이것을 조성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은 상호 신뢰가 조성될 때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냉전구조에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와 연관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가지를 보고 잎사귀를 논하는 방법을 써야지 핵문

제 하나만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행이 이번 9·19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와 동북아의 안보 협력체제 구성문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대단히 진일보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② 2차 북핵 위기의 전개과정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3대 주적으로 규정하고 클린턴 정부의 대북 중유 및 경수로 지원 계획을 철회

제2차 핵 위기는 2001년 초에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야당시절부터 제네바 합의가 잘못된 것이며,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아니라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유를 공급하고 경수로를 건설해준 것을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집권 초부터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가 취했던 대북 정책은 굴욕적인 것으로 미국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A.B.C (Anything But Clinton)이라는 유명한 구호가 그때 나왔지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게 되고, 9·11테러 이후에는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같이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을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해서 정권교체를 시키고 선제공격할 대상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북한이 이란과 이라크와 같이 미국의 3대 주적(主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네바 협약을 미국이 명분 없이 먼저 깰 수는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강경파들은 협약을 깨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은 2002년 10월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제네바합의를 어기고 중유공급과 경수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

이에 맞서서 북한은 핵 활동을 재개하고 NPT 탈퇴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부시정부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이라크 침공 및 다른 외교문제에 전념하느라 북한에 대해서 신경을

미국, 합의에 도달 하려는 유연한 분위기로 전환

많이 못 썼습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2005 2월에 터지게 됩니다. 2월 10일 북한은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거든요. 이것은 핵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충격적인 일이었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CIA 부장은 처음에는 헐박이고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2탄이 터집니다. 북한은 5월 10일 제 2차 핵 활동을 개시하면서 5메가 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추출했다고 발표합니다. 이것을 또 플루토늄으로 재처리하게 된다면 또 어마어마한 숫자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했죠. 이것을 계기로 미 국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양자협상을 추진하고 5월 13일에 반년 이상 정지시켰던 뉴욕 참여활동에서 대북 협상을 위한 접촉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6차 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기간 진행이 되었습시다만 미국은 유연한 태도로 합의에 도달하려는 분위기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원칙문제에 합의를 하게 됐다고 봅니다. 이것이 2차 핵 위기의 간단한 전개과정입니다.

2. 9·19 공동성명 내용과 과제

① 9·19 공동성명 도출 배경

9·19 공동성명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신축적인 태도가 주요했음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합의에 어떻게 해서 성사되었는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2004년 말과 2005년 초까지만 해도 이런 합의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시 정부 하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죠. 부시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고칠 가능성은 희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시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외 정책노선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기 행정부 때 이라크를 침공했었지만 이라크 사태는 악화되어가고 있고, 이라크는 제2의 베트남이 되지 않느냐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대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실용주의 외교로
전환

이란에는 강경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핵문제가, 유럽 3개국에 맡겼습니다만,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국내 경제지표는 악화 일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정적자가 4,200억 달러, 무역적자는 6,200억 달러, 국가채무는 2조 달러가 넘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방비는 전 계 모든 국방비의 절반인 4,700억 달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미 국내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반미 감정이 심화되고, 허리케인이라는 자연재해까지 겹쳐 80%였던 지지율이 40%로 급락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시 행정부는 라이스 국무장관이 들어선 이후로 실용주의 외교로 전환하였습니다. 부시 1기 때의 외교정책은 강경파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인데, 2기에서는 라이스 국무장관과 국무성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스의 입지가 강화되고 신뢰를 받게 됨으로써 실용주의 외교노선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대북 전략도 수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결보다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재임기간 중에 무언가 하나 평화적으로 해결한 것이 있어야 하는 그런 꿈도 있겠지요. 그래서 미국은 6자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고농축 우라늄 계획 시인 및 폐기를 선언하라고 요구하면서 3차까지 6자 회담이 공절 되었지만 이번 4차 회담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이루어졌고,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더해 미국은 6자 회담에 임하면서 선(先) 폐기 후(後) 협상을 고수했었는데 이번에는 동시 이행으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점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공동성명이 나온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미국의 태도 변화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북한은 유리한 입장에 있는 현 상황에서 협상을 끝내는 것이 득이라고 판단

제조하고 핵 보유국가를 선언했다는 것이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핵연료를 추출했다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2탄을 날렸는데, 그럼으로 핵무기를 더욱 증강시키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게 되면서 미국이 양자 협상에 나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지요. 북한은 이것을 배경 삼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지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번에 6자 회담에서 유연한 태도로 임했고, 이것이 이번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중국은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서 그 영향력을 확인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국의 역할이지요.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지도적 국가로는 있지만 국제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 안보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의 포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성공을 중국의 승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승리라고 할 필요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외교정책의 성공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높이 평가해야 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 외교의 적극성입니다. 사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팀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은 6월 10일에 당일 워싱턴 방문을 통해서 평화적 해결과 관계 정상화를 호소했지요. 이것이 부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15 5주년 행사로 평양에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하고, 중재안을 제시하고, 대북 송전 전략을 직접 하겠다는 것을 제의하면서 6자 회담 참가를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김정일 위원장은 7월쯤 나간다는 것을 시사했지요.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남북관계에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보고, 또 반기문 외무부 장관과 라이스 장관이 뉴

육에서 경수로 문제로 파탄지경에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그리고 특히 높이 평가할 것은 송민순 대표의 협상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번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합의가 앞으로 실천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어 핵 문제가 수년 내에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고 동북아의 안보 협력체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 하려는 이유는 안보 위협, 북-미간 적대관계 지속, 북한의 전력난으로 요약할 수 있음

② 북한 핵 문제의 요체와 9·19 공동성명의 주요 합의 내용
 북한 핵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와 긴밀히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안보 위협에 대한 자위력 구축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전에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안전보장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 지속입니다. 따라서 북-미간 적대관계 해소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 평화적 공존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전력난입니다. 북한은 이중적인 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력생산과 다른 하나는 핵무기 개발이지요. 어쨌든 그 중에 하나인 전력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폐기 문제는 이 세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과거 제네바 합의도 이 세 가지를 다루는 합의였고 이번 9·19 공동성명도 이 세 가지를 다루는 성명이었다는 것을 착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번에 공동성명은 제네바 합의의 구도를 재확인하고 그것을 보호하려는 합의라고 볼 수 있겠지요.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인데 다만 형식에 있어서 다자 합의라는 것, 구속력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동북아 평화질서와 연관시켰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가

9·19 공동성명은 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 에너지 공급 합의로 요약할 수 있음

9·19 공동성명의 주된 내용은 첫째 한반도 비핵화, 둘째 북-미 관계정상화, 셋째 에너지 공급 합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 포기 및 안전조치 입장 준수, 그리고 미국은 북한 불가침 약속과 함께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 금지를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과 북한은 상호 주권 존중, 평화 공존, 그리고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도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새로 참가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6자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5개국이 에너지를 공급하기로 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6차 회담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에너지 공급에 반대하지 않는 대신 원유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경수로 문제가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4차 회담의 1단계 회담이 휴회로 들어갔던 원인으로 경수로 문제였을 만큼 이것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경수로에 앞서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고 과거 잘못을 저지른 전력도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했지요. 미국이 경수로 문제에 대해 신축성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문제를 논의 할 수 있다'는 다소 애매한 표현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3가지 기본적인 문제에 더해서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을 별도의 포럼을 통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동북아의 안보 협력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자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내용이 있는데 모호한 내용들은 앞으로 꼭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③ 향후 과제

경수로 문제 해결
이 향후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큰 변
수임

북핵 문제는 한반
도 평화 안착 과정
에서 함께 진행되
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앞으로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실천방안의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한 후에 이행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요. 특히 경수로 문제가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북한에 전력 200만kw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경수로를 종결시킨다는 전제 하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맞물려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폐기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속에는 일단 형식에 있어서는 들어 간 것으로 보이는 고농축 우라늄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따진다면 다시 난관에 봉착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9·15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 벌써 '선 핵 폐기, 후 경수로 제공'과 '선 경수로 제공, 후 핵 폐기'가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문제는 단계적으로 동시 이행한다는 원칙 하에 상호 신뢰를 조성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북한이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지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실한 보장과 믿음이 없는 한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있어서 먼저 버리면 좋겠는데 신뢰가 조성이 되지 않아서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은 북한-미국간 적대관계 해소, 일본-북한 관계 정상화, 남북 관계가 활성화를 의미하며,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서 군비통제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함

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미국의 강경파들이 소리를 높인다면 강경책으로 회귀 할 염려도 있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북한이 욕심을 너무 부리지 않고 6자 회담의 다른 다섯 나라들이 같이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서 단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수로 같은 문제겠지요. 앞으로 두고 보아야겠습니다.

북한은 클린턴 정부 당시 NPT에 가입하고 원자력 발전소 폐기에 대한 댓가를 요구

사실 경수로 문제를 이해하려면 미국 클린턴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북한은 그 당시 NPT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NPT에 가입하면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것은 결국 북한도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북한은 사용 후 연료를 군사용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흑연 감속로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 80% 공정에서 건설이 중지된 50메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향후 건설하는 데에 5~6년이 걸리는 200메가와트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폐기할 테니 대신 덜 위험한 것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수로지요. 클린턴 정부는 경수로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2,000메가와트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었습니다. 북한은 바로 이러한 과거를 배경으로 경수로 문제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것은 북한에 우라늄 매장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 후, 우리가 남쪽에 원자력 발전소를 20개 가동하고 있는데, 북한에 매장량으로 봐서 수 십 년 동안 자급자족할 정도라고 합니다. 북한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 원광에서 에너지 자립을 이루하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 그곳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자체 생산한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클린턴 때에는 괜찮다고 해놓고 후에 안 된다고 했

클린턴 정부에서는
경수로 제공에 합
의했으나 부시 행
정부에 와서 이를
철회

죠. 그 이유로 북한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노바 합의는 미국 입장에서 굴욕 외교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졌죠. 부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악의 축인 북한에게 원유며 경수로를 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쪽으로 대북 정책을 펴 왔는데, 경수로를 허용한다면 이제껏 펴왔던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명분상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부시 정권 하에서 체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가 다음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C안, 즉 심포 경수
로 공사 재개와 국
제기구를 통한 경
수로 관리가 가장
합리적임

저는 고려해 볼만한 해결 방안을 네 가지정도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A안으로는 심포 경수로를 종료하고 한국이 그 대체용으로 전력을 직접 송전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이것은 제의되어 있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안은 부시 행정부가 있는 동안에는 경수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심포 경수로의 폐기 시한을 연장하고 한국이 송전을 해주는 방안입니다. C안은 협상을 잘 이루어서 미국이 양보한다면 경수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경수로는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에 운영관리법을 주어서 그것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케도(KEDO)라던가 또 다른 기구에서 관리하도록 하자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D안은 심포 경수로는 아니라 다른 경수로를 새로 지어주는 방안이 있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전력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경수로를 지어줄 수 있다는 안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소련이 심포에 1980년 원자력 발전소 4개를 건설해 주려고 합의했었지요. 그래서 당시 소

련이 북한에게 NPT에 가입하라고 해서 1985년에 NPT에 가입하고 소련에게 원자력 발전소 4개를 보장받으려고 했었는데 고르바초프가 등장 이후 소련의 전환 과정에서 무산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가 끼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3, 4년 전에 러시아와 북한은 러시아의 잉여 전력을 공급해주는 안을 협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제사정이 어려워니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러시아·북한 3자 협력으로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부했었죠. 이런 과거사 때문에 혹시 러시아가 들어오는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해 보았는데, 경수로 문제는 앞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황해도 지역에 남북 공동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조성하고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수 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것은 사실상의 통일 사항부터 실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통일에 접근하자, 평화 공존하면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서 통일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6·15합의입니다. 통일을 미래의 목표이자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나가는 개념으로 바뀐 것이 6·15합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같이 일하고 전력을 주고받고 이것이 통일이지 무엇이 통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통일을 만들어 나간다는 개념으로 합의를 했지요. 현재 진행형 통일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이렇게 하면서 안보 위협도 감소하고 나중에 군축도 하고 긴장도 완화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접근이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방안은, 그전부터 생각한 것인데, 휴전선 직후방인 황해도 지역에 원자로 원자력 발전 단지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전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발전소를 건설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바로 휴전선에

원자력 발전 기지를 점차적으로 건설해서 남북한이 같이 쓰면 이것이 바로 통일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 한반도 정세 전망

병행전략을 통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요체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관계는 그동안에 병행전략이나 연계전략이나 하는 점이 교차되어 왔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과 함께 북핵 문제도 같이 병행하자는 것이 병행전략이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 연계전략입니다. 강경파 일부에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위험한데 무슨 남북 관계 진전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은 김영삼 정부 때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는 파탄되고 말았었지요. 그런데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된 병행 전략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지금 참여정부에서 계속 병행전략을 쓰고 있고 병행전략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요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는 6·15 남북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불신과 대결의 시대에서 화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

남북 관계는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분단 60년을 시대 구분 한다면 6·15이전과 6·15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5시대라는 것이 북측 남측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6·15 이전시대는 불신과 대결의 시대였는데 그 이후에는 화해로 접어들었다는 것이지요. 6·15이전에는 말은 많았고, 실천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 이후에는 합의된 것이 실천되면서 남북이 오고가면서 서로 돕는 현상이 벌어지고,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전력을 준다는 상황까지 진전되었습니다. 인적 왕래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북한 평양지역을 방문한 사람만 만 명을 넘을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지요. 6·15시대가 열리면서 남북 정상회담

에서 논의한 것이 3가지인데, 우선 전쟁을 막고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논의했고, 두 번째로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즉 통일의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통일은 즉각 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목표인 동시에 과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하여 평화공존하면서 남북이 힘을 합쳐서 통일을 이루자 하는 진행형 통일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연합제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공통점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통일을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당면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협력입니다. 남북 간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상호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조성해 나가면서 통일을 이루자 하는 것이었지요. 앞으로 계속 신뢰조성을 통한 남북 연합 제도화,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 건설,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를 통한 민족사회 통합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군사협력 확대를 통한 군비통제 실현과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북 관계와 일-북 관계 정상화가 성사되고 동북아의 안보 협력체제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쟁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토론

(장달중 서울대학교 교수) 우선 제일 우리가 눈 여겨 봐야 할 회담의 초점은 그동안 성사되지 않던 북-미 양자회담이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중국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참여한 것은 중국의 압력이었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다자틀 속에서 양자회담이 병행이 되는데 사실상 다자틀이

한국이 주도하는 정책이 향후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합의를 얻어낼 수 있겠는가?

무용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9·19 공동성명의 실천 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제기될 문제가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쉽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1990년 일본의 가네마루라는 사람이 김일성을 껴안고 그 자리에서 형님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북-일 수교를 하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 제가 그 당시에 경제 고위 관료로부터 흥미로운 말을 들었는데 김일성은 이제부터 신에서 인간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었지요. 일본 관료한테 걸려들면 문자 하나하나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합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상당히 높이 평가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반발 내지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하는 것이 우리나라 북핵 외교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중국이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한국과 중국은 한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외교 안보전략에 근본을 흔들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로 한 것인지 어떤 점에서 나온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외교안보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됩니다.

세 번째로 북핵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문제로서 우리 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관심이 있는 것은 이번 다자 회담체제 속에서 양자회담이 주가 되고 다자 대화가 종이 되는 구도에서 결국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분단이 고착화 되는 것은 아닌가?

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가는 것은 가는 것 같은데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외국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중국 단둥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물자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식료품이었는데 지금은 건설장비들이 들어가는데 중국이 북한을 동북사성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가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 체제 문제의 핵심은 주한 미군의 역할 문제일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대선 구도와 맞물려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북한 핵문제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휘말려서 북핵 문제가 오히려 각광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정치와 절대적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힐 차관보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국내적 이해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외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외교가 조화를 시켜가면서 할 수 있겠는가 걱정입니다.

북한 경제가 남한에만 의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사회·문화적 접근을 하는 것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나치게 북한의 경제가 남한에 의존하는 형태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면 일본이나 미국의 자본도 들어가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경제에 지나치게 북한이 의존하는 문제를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 이 경제적 종속에서 오는 마찰이 안보문제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북-일, 북-미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국제

자본이 북한에 많이 들어가고 북한의 경제가 다변적으로 종속되는 형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주도적으로 북한을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이용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방안이 제기 됐습니다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기지를 운용하다가 잘못하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위험한 곳의 중간에 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좀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남북간 신뢰 구축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

(황동준 안보경영연구원 원장) 과연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서 지금까지 얻은 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핵을 가지고 강대국과 같은 테이블에 섰다는 것 외에 경제적으로는 별로 큰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중 플레이,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교류 등등은 남한과 북한이 하고 핵문제와 군사 문제는 미국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한 사회를 보면 사실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안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남북 관계 정상 회담 등을 보면 여러 가지 신뢰구축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페이스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뢰 구축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북 평화를 위한 중대제안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말씀을 하셨고 현재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이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8·15때에 노무현 대통령과 한반도에서의 독자적인 평화에 대한 유머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혹시 이러한 평화 협정,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중대 제안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알

북한 군부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남북 핵문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군부라고 생각합니다. 임 장관님은 북한을 제일 많이 다니셨고 면담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반도 전반적인 핵문제를 포함해서 과연 이 북한 군부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정 수준의 당근과 채찍 정책을 적절히 써야하지 않나?

마지막으로 남한이 이런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배합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로 한 것은 당근정책인 것 같습니다. 채찍정책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일부에서는 가만 두면 망할 정권이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병행전략에서는 개인적으로 100% 동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도 일정한 수준의 당근과 채찍 정책을 적절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외교 안보 팀이 남북 관계를 포함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핵 문제 등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달중 서울대학교 교수) 아까 통일을 목표의 개념이 아닌 과정의 개념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게 가능하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관한 모든 것을 할 때 통일에 대한 원칙의 합의가 없는 한 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것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평화체제 구축의 선결조건으로 규정해야 하지 않나?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9·19 공동성명에서 평화체제에 관한 언급은 결과적으로 6자 회담에서 의제를 분산시킴으로써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핵 포기를 맨 뒤로 미루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체제라는 것이 한미 동

맹관계, 무기 통제, 재래식 무기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쪼여있는 문제거든요. 북한은 이러한 문제들을 6자 회담에서 핵문제와 같이 논의하면서 핵 포기를 맨 뒤로 미루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90년대를 돌이켜보면 1차 북핵 위기가 있었고 그 해결 이후에 일련의 협상 끝에 핵 동결이라는 기본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4자 회담이라는 것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단기적이었는데 2차 위기에 와서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를 같이 합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핵 문제는 평화체제 구축의 선결조건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서 평화체제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라고 하면 북한의 전략의 말려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자간 안보협력 문제라는 것도 한미동맹에 있어서 보안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미국이 좋다고 하겠지만 이게 대체관계가 되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상충되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북한 지원을 위한
경제적 부담 문제는 없는가?**

(이상만 중앙대학교 교수) 경제 부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에는 전력 공급이 경수로를 대체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는지 굉장한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로를 그만 두는 줄 알았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또 경수로는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혹이 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조달 방안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반사람들이 보기에 저마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데 신문에 처음 12조원이라고 하고, 또 9조원이라고 하는데 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현재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돈이 없어서 주류 세 까지 올리는 상황에서 이것이 준비가 되 있냐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영광은 지금 받고 부담은 다음 정권이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 프로세스가 상당히 길다고 하는데 모든 공은 현재 정부가 즐기고 부담은 결국 다음 정권이 다 맡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현재 협상 타결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부터는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부가 어떤 방안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심포 경수로를 마
저 완공하고 그것
을 국제기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정세현 이화여대 석좌교수) 경수로 문제 해법 관련해서 네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A안은 북한이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경수로를 보장을 해준다면 생명력이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심포를 재활용하자는 것인데, 돈이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끝내버리기 아깝지요. 세 번째는 북한이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형식으로 하자는 것은 미국이 거부를 했다는 것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양보를 해서 심포 경수로를 완성 하고 그것을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심포 경수로에는 우리나라 돈이 15억 달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억 달러(약 3조 원)를 더 내서 심포 경수로를 완공하자는 것이지요. 대북 전력 공급을 위해 약 11조 원이 예상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일본도 이쪽이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포 경수로를 지어만 주면 자원도 무궁무진하게 있고 국제관리 하에 두면 그 다음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양보하도록 만들려면 북한이 잘 해야 하는데 미-북 간의 신뢰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6자 틀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동북아 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함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몇 가지 코멘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장달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자 틀이 무너지고 양자 협상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래 미국과 양자간에 해결되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변국의 지지를 받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다자틀로 끌고 갈 때 상황을 보면 부시 행정부 1기 때 표면적으로는 다자간에 책임과 부담도 공유하면서 해결하자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많은 평론가들이 지적했습니다만, 5개국이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제제하고 고립화시키고 결국은 굴복을 시키든지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죠. 어떻게 보면 역 연합전선이 형성될 우려마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6자 회담을 했다면 실패였겠지요. 그러나 그 후에 오히려 중국 한국 러시아 등이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문제와 관련해서 6자 회담을 좋은 포럼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6자 회담이 기초가 돼서 동북아 안보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유용한 포럼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6자 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자간에 합의한 것은 깨지기 쉽지만 6자 틀에서 합의하면 그래도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6자 틀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양자협상이 되어야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9·19공동성명을 보시면 일본과 북한이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 이외에는 기본조항 3개는 전부 미국과 북한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장달중 교수님의 지적은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6자 틀을 발전시키면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구성해나가는 외교전략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틀 안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진행시킬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한반도 프로세스는 종전협정의 당사자인 4개국이 물론 해야 할 일입니다.

**남북한간 경제협력
을 더욱 활성화하
는 것이 필요하며,
단 군비통제를 반
드시 병행해야 함**

그 다음에 경제적 접근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의 대 북한 경제 진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북지방에서 네 번째 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까지 나왔는데 경제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요새 북한에 가보면 중국 물자가 많이 유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과 수교협상에 성공하여 식민지 통치기간에 대한 배상으로 엄청난 액수가 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본의 경제 진출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때에는 한국의 경제가 서야할 땅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반드시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 산업 같은 것은 남북한간에 이루어져야 통일에 유리한 것이지 이런 것이 다른 나라와 이루어지면 통일에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좁은 소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하였습니다. 위대한 저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남북이 경제협력을 해서 남북이 함께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룩하는 과정은 반드시 군비통제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안보위협을 감소시키고 해소시키면서 해야지 경제만 먼저 나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일본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외의 많은 나라들이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자본과 기술 진출이 필요하고 우리 힘만으로는 더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

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에 원자력 단지를 만들자고 하는 것도 군비통제와 병행되는 문제입니다. 군사적 위협이 있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통일이라는 목표는
평화를 만들어 가
는 과정을 통해 이
루어지는 것**

또 하나는 통일은 목표인 동시에 과제라고 했는데 목표이지만 과정을 통해서 이뤄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남북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통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화통일, 하나는 자유 민주통일을 하겠다고 부딪히면 발전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일은 과정으로 보고 평화공존하면서 서로 힘을 합해서, 북한 표현으로 하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의 과정을 관리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평화공존이 중요하고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하다보면 통일방안에 합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통일에 접근하자는 것이 합의를 본 것입니다.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이 될 수 있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통일문제의 접점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환기에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며,
이것을 최소화 하
면서 미래지향적으
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

그리고 황동준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환기를 거치고 있지요. 냉전을 끝마치고 탈냉전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기의 단계에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지만 과거와 미래 위험과 기회가 병존하고 있는 상태를 전환기라고 할 수 있지요. 과거에 집착하면 발전할 수 없고 미래만 향해서 나아갈 경우 잘못하면 위험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이것을 잘 조정해야겠지요. 전환기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

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프로세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접근해야 함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평화 프로세스는 아직 공식적인 것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만, 국민의 정부 때부터 계속 구상해왔고 이것을 페리 팀과 협상을 해서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 냈던 것이지요. 페리 프로세스는 우리의 작품입니다.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는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가지를 논해야 한다는 접근방법을 미국이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접근이지요. 미국은 장기적인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닥친 것만 중시하는데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접근하는 것과 장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눈앞에 닥친 것만 다루는 것이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상을 하고 하나씩 밟아 나가자는 것이 성공을 했지요. 그래서 북-미관계가 개선이 되고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미국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까지 갔다가 정권이 교체 되고 클린턴의 접근방법은 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프로세스는 현 정부에서 그전 정부의 개념을 이어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평화협정부터 먼저 체결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결과로 나올 것이고 이러저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평화협정이 될 것입니다. 또 평화협정만 하면 뭐 하는가 하면 그런 합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런 합의는 남북 간에 해 놓았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에 불가침 선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곳을 보면 평화선언에 들어갈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은 결과물로서 실질적인 것입니다. 진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북한 군부의 쿠데
타 가능성은 현재
없으며, 자체 붕괴
가능성도 매우 희
박함

북한 군부의 시각은 알기 어렵습니다만 선군 정치를 내걸고 주도하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고 현재로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지요. 군부 세력이라는 것은 최고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을 논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 15년이 되었는데 지금 북한이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시 정권이 북한 붕괴를 몰고 갔는데 9·19 공동성명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거리 내에서 반 체제세력이 조직화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이 불안이 많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불안으로 조직화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런 것이 될 때에 붕괴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는 것이 정부기관들의 판단이지요. 1990년 초에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지요. 루마니아처럼 1, 2년 뒤에 붕괴된다는 것이 판단이었는데 안 맞았지요. 그리고 김일성이 죽고 식량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2, 3년 내로 붕괴된다는 판단을 내놓았지만 틀렸습니다. 부시 정권에 들어가서는 북한이 붕괴될 수 있겠다는 정보판단이 아니라 북한을 붕괴시켜야겠다는 정책이 나왔지요. 그런데 이것도 4년이 지난 후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실에 토대를 두고 북한이 붕괴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근거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두고 볼 일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답

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상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연계 전략적인 사고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병행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두 가지 생각은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이상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문제라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세현 장관님께서서는 C안이 가장 좋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길정우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포럼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아니면 개성공단 관리를 맡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현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또 모실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HR

정리 및 교열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sjhong@hri.co.kr) ☎ 02-3669-4182

이상우 선임연구위원 (leesw@hri.co.kr) ☎ 02-3669-4014
